

5월단체, 전두환 흔적 일괄처리 고심

기념식 거꾸로 묻어 시민이 밟도록 한다는 계획 잠정 중단 범중·진압군 총흔탄 등 추가확보 위해 군부대 등 설득 주력

비석, 범중, 5·18 진압군 총흔탄 등 전국에 흩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흔적들을 처리하기 위한 5월 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써진 11공수여단 부대 이전 기념석을 이미 확보한 5월 단체들은 이 기념석을 시민들이 밟을 수도 있도록 땅에 박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모든 전두환 관련 흔적을 확보한 다음, 일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는 이날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 입구에 11공수여단 부대 이전 기념석을 묻을 계획이었으나 중단했다. 이 기념석은 1983년

11공수여단이 강원도 화천군에서 담양군으로 이전하면서 부대 입구에 세운 것으로, 지난날 16일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와 5·18자유공원 인근에 거꾸로 뒤집힌 채 놓여져 있다.

당초 5월단체는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 묘역) 입구에 묻혀있는 “전두환 민박 기념비”처럼 11공수 기념석도 시민들이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분노의 의미를 담아 밟고 지나가도록 공원 입구에 묻는다는 계획을 연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따라 5월 단체는 잠정적으로 공사를 연기했다.

일부 5월 단체 회원들은 “11공수 이전 기념석은 전국에 흩어진 전두환 흔적의 극히

일부일 뿐으로 한번 설치하면 이전이나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두환 흔적을 확보한 다음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석을 훼손할 경우 현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계엄군 총흔탄, “전두환 범중” 등 다른 5·18 상징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군부대가 총흔탄 등의 소유권을 광주시민들에게 굳이 넘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11공수여단 부대 내에는 이전기념석뿐만 아니라 5·18 진압군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총흔탄도 존재하고 있다. 이 총흔탄에는 1980년 5월24일 계엄군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부대원 등 11명의 이름이 “전사자”로 구분돼 있다. 계엄군 사망자를 기리는 총흔탄과 전두환 이름이 새겨진 기념석 등 11공수여단을 비롯한 3·7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 등 5·18 당시 광주 투입 군부대라면 모

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월 단체는 모두 광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 상무대 무과사 “전두환 범중” 반환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조계중 총무원장이 원형스님으로 바뀌며 조계중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부처님의 성물’인 범중을 광주시에 넘길 경우 불교에 대한 모독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11공수 부대 이전 기념석보다는 진압군을 전사자로 표기한 총흔탄이 더 큰 문제로, 당분간 군부대를 설득해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모든 전두환 신군부 흔적이 모이면 한 곳에 모아 역사를 바로 잡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알람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납품계약 수취 공기업 직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관급자제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태호)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2171만원을 선고받은 모 업체 대표 B(44)씨의 항소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신

분인 공기업 직원이 관급자제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4000만원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뇌물 수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인 A씨는 2016년 B씨와 연관된 2개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특정 관급자제 납품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B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납품계약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업체 2곳에서 각각 1억8180만원과 2억6037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무야, 목 마르면 물 마시렴” 3일 광주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무더위와 폭염이 연일 지속되자 가로수고사피해 예방을 위해 중외공원 입구 가로화단에 심어진 수목에 물주머니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법원 “1000원 넘지 않는 방안 검토하라”

법원이 전남대표 관광지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에 대해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훈)는 “A·B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은 2018년 4월 11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이용하려는 A씨와 B씨로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물론 인근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어린이프로방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입장료로 각각 2000원씩을 징수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그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다녔던 길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징수”라면서 “담양군은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초 무료로 이용하는 길이었으며, 요금 징수를 위한 매표소 운영 비용 등이 상당하다는 점, 2000원의 입장료가 너무 비싸 이용객이 감소하는 현상 등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면서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로 1000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법 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온 당시 경찰

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 의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장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A(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B(여·20)씨 등 17명에게 2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같은 혐의로 출소한 뒤 고장적인 거주지 없이 광주도심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광 갯벌 고립 일가족 4명 구조

영광 앞바다 갯벌에 고립됐던 일가족 4명이 1시간 40여분만에 해경 헬기로 무사히 구조됐다.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영광군법성포 앞바다에서 선박(11급)이 갯벌에 얽혀 고립된 최모(61)씨와 사위 최모(35)씨, 손자(6세, 4세) 등 일가족 4명을 헬기를 이용해 구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일가족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께 낚시 후 항구로 돌아오던 중 물이 빠져 선박이 갯벌에 고립돼 해경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헬기를 동원해 구조바스켓으로 2회에 걸쳐 일가족을 구조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현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환자 유인 아냐”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 아니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현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